

도의회 상임위 하반기 업무보고

‘비위 예방 위한 제도마련도’

도의회 행사위 소방본부 대상 하반기 업무보고 문승우 위원장 “소방공무원 비위 발생 시 상급자에 패널티 부여, 대원 간 결속력 떨어뜨릴 수 있어”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소방본부 등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달성과 보완점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현재 도내 소방공무원의 개인적인 음주운전 등 비위발생 시 상급자에 대해 BSC 성과 평가 점수 패널티를 부여해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오히려 대원 간 결속력을 떨어뜨리는 과한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해볼 것을 주문하고, 강력한 처벌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비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전북도에서 30년 만에 추진하는 소방헬기 도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자칫 헬기 도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절차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을 위해 철저하고, 세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시스템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

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건수가 작년 2건, 올해 상반기에도 2건이 발생하였는데, 면허정지 또는 취소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지 발령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차고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방차량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상당하므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화재피해로 주거공간이 소실된 주민에게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119행복하우스 건축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한 뒤, 선별적이고 특정인에게만 행복하우스를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여파 따라 비대면 사업 발굴을”

문건위, 하반기 업무보고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지난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정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변화한 상황에 대한 비대면 사업 발굴 등 능동적 대응을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지난 행사 무감사때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을 지적했으나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 미술작품 구입 등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충 등의 노력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또한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소규모 위주로 관광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유적지 발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내용을 충실히 채워 전라북도 차원에서 민간의 준비를 해주기를 당부했다. 최찬욱 의원(전주10)은 코로나로 인해 전주세계소리축제 규모가 축소되어 발생한 보조금 잔액을 반납받지 않고, 도내 지역 공연예술계의 코로나 극복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입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국판 뉴딜, 그린에너지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전북 부안군 위도 근처의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도착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북사진기자단 제공)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 목표”

문 대통령,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방문

“해상풍력 규모 124MW에서 12GW로 백 배 확대 그린 에너지 해상풍력으로 기후위기 속 성장 동력 대규모 민간투자 촉진, 연 8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의 목표는 명확하다”며 “3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안군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와 격포항 인근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상풍력이 시작단계인 지금,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세 개 단지 124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을 2030년에는 백 배 수준인 12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는 3대 추진 방향을 세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현장 방문은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첫 정적 현장 방문이다. 디지털 뉴딜 현장 방문(6월 18일) 이후 한 달만으로, 그린 뉴딜 정책의 본격 추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주도하여 체계적인 대규모 발전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 피해가 적은 부지를 발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만들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배후 부두, 전용 선박을 비롯한 인프라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상풍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어업생산량 감소로 시름이 깊어진 어민들과 지역주민들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발전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해 연간 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만큼 해상풍력이 어민들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그린 에너지, ‘해상풍력’으로 우리는 함께 성장하며 기후위기 대응 속에서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해상풍력 시설의 허부구조물에 양식지원 복합단지를 조성했다”며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공존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체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에서 시작된 해상풍력 바람이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기대한다”고 했다. /뉴시스

전북형 뉴딜 실천 과제 도출

민주 전북도당, 21일 '전북형 뉴딜 토론회'

전북형뉴딜 정책의 방향성 정립과 실천 과제 도출을 위한 '전북형뉴딜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라북도, 에너지전환포럼, 전북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한국형뉴딜에 대응하는 전북형뉴딜의 방향성을 정립해 전북형뉴딜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민,관,학 주도의 전북형 뉴딜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에는 전주대학교

임성진 교수가 맡게 되며 발제자로써는 홍중호 서울대교수, 이창훈 환경정책연구원, 이지훈 전북연구원이 나선다. 토론자로써는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오일영 환경부기후전략과장, 신원식 전북도정책기획관, 박은재 전북지속발전가능협의회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전북형뉴딜 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에 부합할 수 있는 전북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전북의 특성에 맞는 뉴딜정책의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섹스 스캔들’ 발언하다

통합당 정원석, 2달
비대위 활동 정지

미래통합당이 ‘섹스 스캔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원석 비대위원에 대해 경고와 함께 2개월간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정지를 지난 17일 권고했다.

통합당 비대위는 “정 위원은 이런 조치에 대해 자성 차원에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조문의 시기를 지나 이젠 심판의 시각이다. 우리는 두 가지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 첫째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섹스 스캔들’ 은폐 의혹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는 공정을 운운하다가 조국으로 뒤통수를 맞고 올해는 젠더 감수성을 내세우다가 미투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잃었다. 국민은 배신감에 빠져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으나 사전 유출 의혹은 현재도 진행형이다”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국민이 곧 국가… 헌법정신 되살릴 것”

민주, 제헌절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72주년 제헌절을 맞아 17일 “헌법 정신을 되살려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풍관 브리핑을 통해 “72년 전 오늘,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공포됐다. 우리 헌법은 ‘주권재민’의 정신에서 시작한다. 국민이 곧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민주당은 제21대 국회

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세법 및 임대차 3법,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 민생 관련 입법과제를 7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고 개혁입법 과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21대 국회가 가장 늦게 개원식을 했지만 이제부터 속도를 내겠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겠다”며 “헌법 정신을 되살려 국민을 위한,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